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35%	2022.07.	복지정책과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예정
- 사업대상
  - 국민기초수급 생계급여 신청·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부적합된 노인가구
- 사업내용
  - 수원형 생계급여 지원 : 단독노인 248,349원, 부부노인 446,424원
- 소요예산 : 729백만원

(단위 : 가구)

구 분	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2020년 부양의무자 초과 부적합 가구	75	67	8	

※ 산출근거 : (생계급여-기초연금) × 인원 × 12월

- 단독가구 : (548,349원-300,000원) × 67가구 × 12월 = 199,673천원

- 부부가구 : (926,424원-480,000원) × 8가구 × 12월 = 42,857천원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확정

- 재원 확보방안 : 전액 시비

##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확보(e)	집행	계획(f)	계획(g)
계	729	0	0	0	0	0	0	0	0	0	729	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729	-	-	-	-	-	-	-	-	-	729	-
민간자본	0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연도별 변경(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업 규모 및 대상 축소

###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초	타시 벤치마킹추진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			√	√						
	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								√	√	
	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								√	√	
변경	중앙정부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변화 검토								√	√	
	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										√
	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										√
누적 추진율	목표	%	10	25	35	35	35	35	35	40	40
	현재	%	10	25	35	35	35	35	35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으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9. 30.)

성 과 지 표	추진 현황
타시 벤치마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10.31.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벤치마킹 / 광주광역시청</li> <li>• 2018.11.14. “시민행복보장급여지원” 벤치마킹 / 대구광역시청</li> <li>• 2018.11.21.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벤치마킹 / 세종특별자치시</li> </ul>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RI-정책-2019-23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li> </ul>

### 5. 추진성과

-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 타 지역 벤치마킹 추진 및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제도 신설 시 시행착오 감소

### 6. 「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성이 있어 오히려 일자리 보장 정책 확대하는 부분 건의</li> <li>• 정부 시책과 상충 여부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 변화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재검토</li> </ul>

## 7. 추진중 사업 분석

### 【문제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등 정책변화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약속사업) 추진 근거가 미약해져 재검토 필요
-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 (2021년)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존립 근거 축소
- (타 지자체)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안 개선 등 검토 추진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실시
  - (부산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추진
    - ☞ 대상자 발굴 저조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및 설문조사 등 이루어지지 못해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연구 지연
-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지자체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 지양
  - 현금성 복지를 자제하고, 지역특화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 필요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발족('19.05.27.)

### 【임기내 미완료 사유】

- 중앙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추진을 유보하고 재검토

### 【대응방안】

- 2021.10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8. 향후계획

-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추진 여부 검토 보고(2022.07.)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명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2461
	생활보장팀장	신용남	2264
	주무관	강아름	2265
협조부서	직(직급)	성명	전화번호
복지협력과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2120
	휴먼복지팀장	최명희	2485
	주무관	이은주	3222